

ISSUE & FOCUS

Newsletter 2016-5

북한의 '7차 당대회' 의 함의와 대북정책의 방향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북한에서 당대회의 기능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제7차 당대회를 5월 6일 개최한다고 공식발표했다. 당대회는 북한노동당의 전당대회로 형식상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이번 제7차 당대회는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이후 무려 36년 만에 개최되고 김정은 집권 이후 첫 당대회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전술의 기본문제', '당의 강령과 규약 채택 및 수정'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서 과연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인가에 대해 외부의 시선은 평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당대회는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정치활동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목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6·25 전쟁' 이전에 개최된 1·2차 당대회에서는 뚜렷한 지도이념을 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1956년 3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고, 1961년 4차 당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와 항일무

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지도이념으로 채택하면서 4차 당대회는 김일성이 유일체계를 공식화하는 기반이 되었고, 1970년 5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채택하면서 주체사상이 핵심이념으로 전면에 등장하였다. 그리고 1980년 6차 당대회는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당과 국가의 지도이념과 노선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당-정-군의 핵심지도계층도 교체해 왔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7차 당대회도 이전의 당대회와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각 도·직할시 당대표회에서 7차 당대회 대표자 2,000여명을 선출하였고 이들은 시·도당 대표회에서 김정은을 7차 당대회 대표로 추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는 각 도·직할시 당대표 2,000여명, 방청객 3,000여명, 박수부대 1,000여명 등 총 6,000여명이 참석해 각종 정치행사를 소화하게 된다. 6차 당대회 당시 중국, 소련 등 118개국 177개 대표단이 초대됐다.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는 이전의 대회와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으로 주요 국가의 방문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외국의 축하사절단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다.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노림수

제6차 당대회 직후 “주민들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이지 못하면 당대회를 열지 말라”는 김일성의 지시 때문에 김정일은 소위 아버지의 유훈통치를 실천한다는 명분으로 당대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집권 5년차인 김정은이 소위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실천하기 보다 제7차 당대회를 강행의 카드를 선택했다. 표면적 이유는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려는 포석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 경제위기와 국제제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막대한 자원낭비가 예견되는 당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임이 분명하다. 당대회 직전까지 김정은은 경제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70일 전투’와 같은 속도전을 독려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정신’을 전면에 내세워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의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집권 5년차의 김정은도 7차 당대회에서 ‘핵을 앞세운 자강력에 의한 통일대전’을 부각시켜 장기독재 기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계략이다. 즉 김정은은 당대회라는 형식적 선거절차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반열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과욕을 부린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선거행위는 매우 형식적 절차이다. 하지만 ‘선거’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김정은에서 쏟아졌던 3대 세습의 비난을 무마할 수 있는 기회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대회 개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쌀밥과 고깃국에 대한 근원적 성과가 없는 상황이지만 핵무장력 강화의 공로를 빌미로 당대회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유일독재기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식적 ‘선거’ 행위를 통해 당-정-군의 핵심지도부에 대한 세대교체도 할 것이다. 또한 당의 지도이념과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김정은의 독재기반과 세대교체는 당의 지도이념과 당의 노선·정책 간에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했다.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지도이념을 제시해 스스로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유혹을 받는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주체·선군사상의 기반 위에 ‘자강력 제일주의(=자강력 사상)’를 지도이념으로 제시하고, 당의 노선·정책은 2013년 제시된 ‘핵·경제병진발전노선’을 재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강력 제일주의’와 ‘핵·경제병진노선’의 공통점은 핵무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는 2013년 김정은이 언급한 통일대전의 핵심병기라는 점이다.

당대회 이후 대북정책의 방향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노림수는 핵무장력 강화를 통해 자신의 장기독재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력을 통일대전의 핵심병기로 악용할 경우 한국의 대응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의 핵무력은 자강(自強)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멸(自滅)을 재촉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김정은의 장기독재체제의 기반을 허물고 핵무력이 자멸을 재촉하는 수단을 찾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주체·선군사상에 기반한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근원적 변화 이외에는 다른 해법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근원적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동구권의 체제전환과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택한 역사적 경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일 때 체제전환과 개혁·개방을 선택하였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최악의 상황은 경제위기, 불평등의 확산, 외부정보유입, 체제신뢰결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는 것이 역사는 증언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해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심화와 주민들에게 외부정보 접근의 확대가 해법이다.

북한경제의 위기심화의 한 방안으로 현재 작동 중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2270호가 제대로 작동시켜 북한으로 유입되는 통치자금을 차단하여 우선은 핵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줄을 막고, 국제협력을 통해 해외인력송출 수입금이 노동자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인내를 가지고 제재가 지속될 수 있는 감시망(monitoring network)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확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민주화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수단임이 분명하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 이후 한국정부의 대북방송 재개에 대해 김정은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사례는 북한이 외부정보유입에 대해 얼마나 위협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증거이다. 또한 북한주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이유는 주체·선군사상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부정보 접근권의 확대는 사상해방을 담보하고 사상해방이 근원적 변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정보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KBS한민족방송을 정보접근권 확대의 매체로 활용하고, 북한주민이 보유한 휴대전화 370만대를 외부세계와 연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북한의 인트라 넷(intra net)을 인터넷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외부정보 유입 → 외부정보의 북한내 유통 → 북한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의 정보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접근권 확대는 통일 이후 북한에 의해 왜곡 날조된 인식을 교정하고 통일이후 사회통합의 인프라라는 점에서도 통일준비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